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7월 19일(화)
담당	정다운(010-6293-0357) 연윤실(010-9466-8908)	페이지	총 8매
제목	장애인권리예산 설명회 <기획재정부 한국판T4프로그램 고발한다>		

장애인권리예산 설명회 <기획재정부 한국판T4프로그램 고발한다>

- 일시 : 2022.7.21.(목) 오후 3시 ~ 4시
- 장소 : 줌(Zoom) <https://bit.ly/장애인권리예산설명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생중계
- 내용 : 장애인권리예산 설명회 및 질의응답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의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2022년 12월 6일부터 진행한 ‘혜화역 선전전’을 151일차, 2022년 3월 30일부터 진행한 ‘삭발투쟁 결의식’을 73일차 이어오고 있습니다.(7.19 기준) 2021년 12월 3일 이래로 총 33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하였습니다.
4. ‘3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이 7월 말까지 직접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며 유보하고 있습니다.
5. T4프로그램은 독일의 나치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비용의 문제로 30만 명의 장애인을 생체실험으로 학살한 비밀작전입니다. T4는 생체실험을 한 연구소 주소를 딴 이름입니다.

6. T4프로그램을 정당화하기 위해 독일 나치가 외친 “한 명의 장애인에게 매일 국가가 쓰는 돈 5.5MR!! 5.5MR으로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는 선전문구는 2022년 대한민국 현재 기획재정부가 외치는 비용 문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7. 장애인권리예산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비용’을 이유로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한국판T4프로그램입니다.

8. 이에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온라인 설명회 <기획재정부 한국판T4프로그램 고발한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T4프로그램이 자행되고 있는지 낱낱이 고발합니다.

9. 보건복지부 ‘23년 장애인정책국 예산안과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예산을 살펴보고 장애인권리예산의 핵심사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자료1] 카드뉴스_T4를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카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00000 RM

T4 프로그램(Aktion T4)

T4를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Volk der nicht auch Dein Geld

n Sie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싸울 힘이 없다면, 살 권리도 없다. 약 70,000명의 장애인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1929년 아돌프 히틀러

나치 독일의 잘 알려진 유대인 학살보다 먼저 존재했던 학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T4 프로그램 (Aktion T4)

1939년-1941년

살 가치가 없는 생명들에 대한 학살

장애 아동에서부터 시작

최대 8,000여명의 장애 아동들이 약물과 굶주림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이후 모든 연령의 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ich kill 5.50 den Staat Erbkranker kann eine erbgefi 1 Tag lei

"한 명의 장애인에게 매일 국가가 쓰는 돈 5.5RM! 5.5RM으로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

약물 주입, 가스실, 총기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 학살...

1941년 T4가 중지될 때까지 약 30만명의 장애인이 학살당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리고 2022년 한국, 장애인은 여전히 사회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년 3월 2일 발달장애 딸 살해 후 자살 시도한 50대 구속영장
 2022년 3월 2일 경제적으로 어려워 7세 장애 아들 입학식 날 살해
 2022년 5월 17일 전남, 조카에게 폭행당한 지적장애인 사망
 2022년 5월 23일 서울, 40대 엄마, 6세 아들 살해 후 자살
 2022년 5월 23일 인천, 뇌병변발달장애복장애인 딸 살해 후 자살 시도, 60대 여성 체포
 2022년 5월 30일 경남, 발달장애자녀의 어머니 투신
 2022년 6월 3일 안산,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 자살

계속 되는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단지 선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 폐지의 거짓 약속

장애인 생존 예산을 비용의 문제로 외면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종합 분야>

■ 기획재정부 한국판T4프로그램 ::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방치

- '22년 만 해도 7건의 사건과 8명의 발달, 뇌병변중증장애인과 그 부모가 죽어갔음.
- 발달·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처절하게 외쳐온 요구를 기획재정부는 '비용'문제로 외면하고 방치한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임.
- 가족과 당사자에게 이동, 교육, 주거, 일자리, 복지, 탈시설 등 모든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고, '비용'때문에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획재정부는 발달·중증장애인 참사를 암묵적으로 사주한 주범임.

<국토교통부 분야>

■ 기획재정부 한국판T4프로그램 1 :: 교통약자 이동권 부정

- 1970년대 지하철이 건설될 때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설되었으며, 버스는 서구에서 80년대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려했으나, 대한민국 사회는 '비용'문제로 전혀 대중교통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생각도,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요구하여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
-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추락참사 이후 장애인들은 지하철로를 내려가고, 버스를 점거하고, 도로 위에서, 정부과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을 찾아다니며 2022년 현재에도 외치고 있음.
-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고, 교통약자법 제3조에 (이동권)을 법적인 권리로 명시함.
-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법(제6조)를 근거로 1차(2007년~2011년), 2차(2012년~2016년), 3차(2017년~2021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모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세운 계획조차도 이행하지 않음.
- 2022.1.19. 개정된 교통약자법이 노선버스에서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대폐차시 예산을 제대로 실행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불가능한 노선을 제외하고 10년 후에는 실효성 있게 이용할 수 있음.
- 노선버스 대폐차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유형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은 모두 제외됨.
-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운행하는 좌석버스 노선(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은 저상버스 모델 개발 R&D('23~'26) 이후 도입 의무화를 명시('27.1.~)한다는 입장이기에, 앞으로 16년 후에나 도입될 제대로 이용하게 될 예정임.
- 2022.1.19. 개정된 교통약자법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은 '할 수 있다'로 되어있음. 추경호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비지원을 가능하도록 '보조금법 시행령4조'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음.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국비지원 비율은 '연구용역'을 핑계로 지연하고 함구하고 있음. 이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비율은 연구용역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결단의 문제임.
-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해소 문제는년 '23년7월이나 적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1년이나 기다려야 할 상황임.
-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비용'논리로 시민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동할 권리조차 오래도록 무시되었음. 이는 헌법에 명시된 '법 앞에 평등은 불평등으로,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다는 권리는 장애인을 특별히 차별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장애인들에게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니라, '우생학적으로 차별하는 차별 공화국'으로 그 역할을 하고 주범임.

<보건복지부 분야>

■ 기획재정부 한국판T4프로그램 2 :: 장애인활동지원 권리부정

- 2005년 경남함안에서 중증장애인이 겨울에 수도관이 터져서 얼어 죽었음.
- 2006년 한강대교를 6시간 기면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증장애인들의 권리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노무현 정부에 요구하였음.
-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권리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도화를 시작하였음.
-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법' 제정하면서, 활동지원시간 24시간 지원을 거부하고, 자부담을 높여서 부과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권리로 보장하지 않았음.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비용'문제로 강력하게 반대한 결과임.
- 그 결과 중증장애인들은 죽어갔음.

[[권오진 4주기 추모글] 오빠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지킬게 / 유명자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71>)

■ 기획재정부 한국판T4프로그램 3 ::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 2012.8.21.~2017.9.5.까지 1,842일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요구하며 농성하였음.
- 문재인 정부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광화문 지하차도를 찾아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완전폐지'를 약속함.
- 2019년7월1일. 문재인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작하며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를 통하여 중증장애인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맞추어 장애인의 권리를 찢아내는 '종합조작표'를 보건복지부에 사주하여 개발하였음.
- 그 결과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가짜 폐지됨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꿈을 삭제시켰고,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를 위반하며, 중증장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방치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한국판T4프로그램 4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정

- 2012.8.21.~2017.9.5.까지 1,842일.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도 함께 진행되었음.
- 사회복지교수 출신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의료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하였음.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완전폐지를 약속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정부 차원에서 언급도 되지 않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인하여 모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권리는 부정되었음.
-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은 비용문제로 지켜지지 않음.

■ 기획재정부 한국판T4프로그램 5 :: 장애인 탈시설권리 부정

-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 5호 (2017)
 -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의 선택과 통제의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지원 제도는 이용할 수 없거나 특정 거주 조건에 묶여 있고, 지역사회 인프라는 보편적으로 설계되지 않는다. 자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발이 아니라 시설에 투자된다. 이는 유기, 가족에의 의존, 시설화, 고립, 분리로 이어졌다.”

-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2006년 제정)를 2008년에 비준함.

- 헌법(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밝힌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자세를 부정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말년에 어렵게 진행되고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발달·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로 격리하고, 배제함으로써, 자원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발이 아닌 시설에 투자하고 있음.

- 그 결과 중증장애인은 유기, 가족에의 의존, 시설화, 고립, 분리로 이어져 갔음.

<고용노동부 분야>

■ 기획재정부 한국판T4프로그램 6 :: 최종중장애인 노동권 부정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가 이행해야 할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 중경증 여부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4.2%, 고용률은 41.7%인데 중증장애인은 각각 21.3%, 19.9%로 현저히 낮음.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6.9%로 경증장애인(5.6%)에 비해 높고, 특히 중증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3.5%, 고용률은 12.5%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종중장애인들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참여가능한 활동수준으로 맞추어서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권교육’ 3대 직무로 구성하여야 함. 3대 직무 수행을 통해 권리를 생산하는 목표는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임.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제8조 인식 제고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무원·국회의원·언론·일반 대중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최종중장애인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국가의 의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

- 권리중심일자리는 (1) 최종중장애인우선고용의 원칙, (2)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권교육의 3대 직무 구성

의 원칙, (3) 권리생산노동의 원칙, (4) 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및 권리이행과 실현의 원칙, (5)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원칙을 가짐.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지난 2020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2021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운영하였음. 2022년 현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춘천시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690명 이상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중증장애인 채용 규모는 서울시 350명, 경기도 200명, 전라남도 82명, 전라북도 10명, 경상남도 10명, 춘천시 44명 등 약 696명을 고용할 계획에 있으나, 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음.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참여하는 최종증장애인의 노동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도입 및 예산확보 필요.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참여하는 최종증장애인의 노동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최종증장애인 참여자가 일할 의사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함.

-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고 법령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종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고 최종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애의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현행의 재정일자리를 축소하고, 최종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데 어떠한 계획도, 고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교육부 분야>

■ 기획재정부 한국판T4프로그램 7 :: 장애인평생교육권리 부정

- 장애인 중 중졸 이하 학력은 장애인 (53.5%), 전체 국민 (11.0%)로 4.5배

- 장애인의 평생교육참여율 장애인 (0.9%), 전체 국민 (40.0%)로 40배나 차이가 남.

- 예산은 1인당 장애인 평생교육 연간 2,287원

- 류기홍(더불어민주당), 조해진(국민의 힘)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반대 의사 표명.

- 장애인들이 학령기 교육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안 분석 자료

1. '23년 부처안 : 총 30개 세부사업(기본경비 2개 제외), 4,583,297백만원
 - 일반회계 26개(신규 2개), 기금 3개, 균특1개(신규 1개)

☞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3년 보건복지부 부처안 자료'
 ※ 6.27. 기획재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실링예산 협의를 위해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한 자료임.
 ※ 이 자료는 전장연에서 별도로 입수한 자료임.

2. 2018년 ~ 2023년 예산 증액 추이

(단위 : 원)

시기	해당 연도 본예산(A)	차기 연도 예산안(B)	증액 (B-A)	증액비율 (%)	비고
2018년	2조 2,213억	2조 7,772억	5,559억	25.0%	문재인 정부
2019년	2조 7,772억	3조 3,100억	5,328억	19.2%	
2020년	3조 3,100억	3조 6,497억	3,397억	10.3%	
2021년	3조 6,497억	4조 852억	3,397억	11.9%	
2022년	4조 852억	4조 5,382억	4,530억	11.1%	'23년 윤석열정부(초안)

-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1년차 25.0% 증액보다 훨씬 못미치는 11.1% 증액으로 예산 초안을 마련 중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전장연이 21.12.3.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3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통해 외쳐온 기획재정부의 실링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한 내용은 거부되고, 자연증가분 이외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됨.
- 기획재정부는 '검토'와 '노력'한다는 말만 지속적으로 앵무새처럼 반복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증액 추이

